

碩士學位論文

# 제주 ‘平和의 섬’ 구상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金 廷 娥

2001年 6月

# 제주 ‘平和의 섬’ 구상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康 根 亨

金 廷 娥

이 論文을 政治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1年 6月

金廷娥의 政治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1年 6月

# 目 次

ABSTRACT .....	1
<b>第 I 章 序 論 .....</b>	<b>3</b>
第 1 節 問題提起와 研究目的 .....	3
第 2 節 研究方法과 論文의 構成 .....	6
<b>第 II 章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역사적 배경 .....</b>	<b>9</b>
第 1 節 역사적 맥락에서 본 제주의 평화 .....	9
第 2 節 4·3사건과 제주 ‘平和의 섬’ 구상 .....	15
<b>第 III 章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형성요인 .....</b>	<b>19</b>
第 1 節 國際的 요인 .....	19
1. 지정학적 위치 .....	19
2. 냉전의 종식과 한소정상회담 .....	22
第 2 節 國內的 요인 .....	26
1.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	26
2. 남북화해질서와 제주 ‘平和의 섬’의 가능성 .....	28

第 3 節 道內的 요인 .....	29
1. 관광, 감귤 산업의 침체 .....	29
2. 송악산 군사기지 문제 .....	31
1) 모슬포 군사기지화 배경 .....	31
2) 도민 저항의 흐름과 결과 .....	32
第 IV 章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분석 .....	36
第 1 節 경제적 차원에서 본 제주의 번영과 개발을 위한 평화의 섬 .....	38
第 2 節 정치·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본 평화의 섬 .....	39
第 3 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본 평화의 섬 .....	42
第 V 章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評價 .....	47
第 1 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限界 및 문제 .....	47
1. 중앙정부의 무관심 .....	47
2.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	48
3. 도민의 참여문제 .....	49
4.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가지고 있는 역할상의 한계 .....	50
5. 제주 ‘평화의 섬’ 모형에 대한 합의 결여 .....	50
第 2 節 제주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제언 .....	51
1. 제주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지지기반의 조성 .....	51

1)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확보 .....	51
2) 도민의 참여와 지지 확보 .....	52
2. 제주 '평화의 섬'의 실천전략 .....	53
1) 평화교류센터 및 평화회담 센터 .....	53
2) 남북교류센터 및 남북평화센터 창설 .....	54
3) 평화관련 시설의 조성 및 효과적 운영 .....	55
4) 평화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	58
5)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의 연계 .....	60
<b>第 VI 章 結 論</b> .....	62
〈參 考〉 .....	66
參 考 文 獻 .....	71



## ABSTRACT

Jeju Island had traditionally been known as the Island of exile and isolation because of its geopolitical location, and has had such nicknames as the pearl of Asia, the honeymooners island, and Hawaii of the Orient among tourists and honeymooners. Let's leave behind these images of Jeju Island here. And consider Jeju Island's image as a venue for peace which was first introduced to the world in April, 1991, when president Roh Tae-woo and former Soviet Union President Mikhail Gorbachev had the historical meeting in the Island. It helped break the narrow world view of the islanders, and made an opportunity to rethink about the international locus of Jeju Island and the peaceful role as an island of peace for the islanders. Now Jeju is fast becoming known as an island of peace after a series of inter-Korean talks, and Jeju has another occasion to promote the islands image as a place of peace before the world. In line with these current trend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to establishing the concept of Jeju Peace Island.

In this context, this thesis has the objective of defining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peace and again of suggesting its practical agenda that the island has to seek for in the future by evaluating a set of ideas that have been suggested since 1990's.

The main concerns of the thesi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six questions:

How we should define the concept of Jeju Peace Island ?

What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concept and why we need it?

What factors are contributing to bring out the idea of Jeju Peace Island?

How the ideas of Jeju Peace Island that have been suggested since 1990's can be analyzed from political · economic · socio-cultural perspectives?

How the idea can be evaluated in the midst of possible problems and limites in the developing process ?

Finally, what is the peace island that Jeju has to explore and what practical approaches need to be considered?

To give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is thesis here will be developing the study of contents hereafter. This thesis is organized in six chapters: in Chapter 1, the purpose of this thesis and the significance of study as well as the concept of Jeju Peace Island are to be suggested; in Chapter 2, the historic background of the idea for Jeju Peace Island will be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Jeju Peace Island will be addressed; in Chapter 3, a set of possible factor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dea 'Jeju Peace Island' will be considered; in Chapter 4, the idea of Jeju Peace Island will be analyzed from political · economic · socio-cultural perspectives; Chapter 5 will evaluate the idea for Jeju Peace Island and its pract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to setting up the Peace Image of Jeju to the world will be discussed later on. After all of these processes, a successful setting up of Jeju as an island of peace will be suggested in making the dream of Peace Island come true; Chapter 6 contain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 第 I 章 序 論

## 第 1 節 問題提起와 研究目的

平和의 개념은 아주 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고 학자들마다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平和라는 개념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며 시대적 상황과 논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개념 정립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平和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은 平和를 戰爭과 대조시키면서 平和란 戰爭이 없는 狀態로 간주하여 왔다. 근대에 들어 루소와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평화로운 인간이 이성적,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모든 긴장이나 충돌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만 平和가 가능하다”는 理想主義的인 平和論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전쟁이라는 끊임없는 인류의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늘날의 平和論은 戰爭防止의 平和論, 즉 긴장이나 대립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와 같은 긴장이나 방법을 研究하여 平和를 실현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sup>1)</sup>

오늘날 일반적으로 平和는 “消極的인 平和(negative peace)”와 “積極的인 平和(positive peace)”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消極的인 면에서 볼 때 平和는 “戰爭의 缺如”라고 볼 수 있다.<sup>2)</sup> 즉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볼 수 있다. 消極的인 平和는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든 종료되거나 없어지면 된다는 식이어서 평화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즉 패전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재발, 말하자면 평화의 파괴가 기다린다. 제 1 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라

1) “평화”, 『정치학 대사전』(서울: 박영사, 1988), p. 1643.

2) Johan Galtung, “Peace”, in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 The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74, p. 487.



는 사정을 보면 제 2 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積極的 平和는 단순히 전쟁이 부재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up>4)</sup> 한편, 럼멜(R. J. Rummel)은 積極的 平和(positive peace)란 단순한 폭력으로부터의 平和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는 마음의 平和를 의미한다고 본다.<sup>5)</sup> 또한 積極的 平和는 자유·평등·정의·환경보호·번영과 같은 원리에 따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적극적 의미의 平和란 힘에 의해 외양상으로 평온이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군사,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제도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적극적 평화개념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구조적·제도적 폭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추출함으로써 積極的 平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다.

“平和”란 국가사회가 안보(security)를 누리고, 개인이 안전(safety)하게 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현재의 충돌이나 갈등(conflict)관계에 놓여있지 않으며, 국내적으로 정치적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간 사회 갈등이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해결되고,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누리면서 삶의 기회(life chance)를 추구하는데 제한받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平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전통적 의미에서의 소극적 평화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平和라는 개념 자체가 國家와 國家間의 문제만이 아니라 國家 내에서 人間の 가치 실현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平和의 개념은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적극적 평화 개념이 너무 확대되어 비현실적인 理想主義的인 平和論으로 이해 되서

3) 김세택, “제주 ‘평화의 섬’ 지정 필요성,”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제주발전연구원, 제주 방송인 클럽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자료집, 2000), p. 13.

4) '78년 33차 유엔 총회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5) 강근형·고성준,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8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7), p. 184.

는 안된다.

1990년대 이후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학계와 시민 수준에서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제주인들에게 낯익은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평화라는 개념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아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연구과정에서 기존에 학계에서 이루어진 평화의 섬 구상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이고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제주가 지향하고자 하는 평화의 섬에 대해 개념 정리를 하고 학계의 평화의 섬 구상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의 섬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제주 '평화의 섬' 개념 정립 설정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출현 배경과 구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제주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섬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음의 의문들에 답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왜 필요한가.

둘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정치·경제·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넷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분석을 통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또한 제주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섬이란 무엇이며 제주 '평화의 섬'을 구현하기 위해 취해야할 정책은 무엇인가.

## 第 2 節 研究方法과 論文의 構成

本 論文은 제주 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역사 발생론적 설명<sup>6)</sup>에 입각한다. 이를 통해서 제주 사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제주 '평화의 섬' 구상 논의가 발생하게 된 요인들을 살펴 본 뒤 현재까지의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논의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일련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제주가 어떻게 평화의 시대로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1990년대 이후 제주 평화의 섬 논의를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질적 분석방법<sup>7)</sup>을 이용한 문헌조사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문헌 조사 방법은 아직까지 정치학 연구에서 중요하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수집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로 연구자가 연구 분야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즉 문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연구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헌을 통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가 갖는 한계라는 데에 단점이 있다. 하지만 설문이나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이나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방법과 달리 문헌조사방법은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직접 마주치는 일이

---

6) 발생론적 설명은 특정한 연대나 일자와 관련시켜 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령 동학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 왕조의 쇠퇴, 외세의 영향, 대중의 주체의식 등이 일련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어떻게 상호계기가 되어 동학혁명이란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발생론적 설명은 우리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치현상이 그 이전의 단계로부터 왜 그렇게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일, 『정치학방법론 : -이론·통계·SPSS』(서울 : 법문사, 1996), pp. 91-92.

7) 질적 분석 방법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비수량적인 형태로서 구하는 분석기법이며 연구사항의 특성이나 사항들 사이의 관련성 등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또한 정치학의 문헌들을 통해서 입수하는 자료는 거의 대부분 질적인 형태의 자료들이다. 각종의 단행본이나 논문, 언론을 통해서 입수하는 자료들도 그러하고, 언론을 통해서 입수하는 자료들도 그러하다.

정치학의 많은 연구문제들 중에서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문제나 정치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양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또한 정치사나 한두 사례의 정치현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 분석방법이 필수적이다. 노동일, 위의 책, pp. 306-324 참조할 것.

없으므로 조사자나 피조사자의 태도가 수집되는 자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또한 제주 정치사와 같이 아주 오래된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 연구하려면 당시의 각종 기록자료와 통계자료, 연구문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1990년대 이후 제주 평화의 섬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평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8)</sup>

本論文은 이를 위해 2차 자료 분석에 주력할 것이다. 먼저 제주 '平和의 섬' 개념 정립을 위해 평화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와 평화 관련 이론들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研究 및 著書, 그리고 제주 도내 학자들의 論文과 세미나 자료집들을 참조하였다. 또한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전제가 되는 역사적 배경을 역사 발생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기록자료들과 국내외 研究報告書 및 관련 論文과 著書들을 활용하였으며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형성 요인을 위해서는 1991년 이후를 중심으로 제주 도내 일간지인 제주일보와 제민일보, 제주 국제협의회에서 발간한 資料集과 도내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들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성격을 분석·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로 제주 도내 학자들의 論文과 세미나 資料集, 제주 도내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분석하였다. 제주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섬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들을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本論文은 「序論」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本文이 시작되는 第 II 章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역사적 배경」에서는 제주의 역사를 지역적, 민족적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제주 '平和의 섬' 개념 정립을 하고 제주도가 '平和의 섬'으로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第 III 章에서는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형성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평화의 시대가 제주에 도래된 원인에 대하여 국제·국내·도내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第 IV 章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분석」에서는 제

---

8) 문헌조사 방법의 유형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노동일, 앞의 글, pp. 242-260 참조할 것.

주 평화의 섬 구상의 성격들을 정치·경제·역사 문화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第 V 章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평가」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평화의 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제주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섬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第 VI 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研究를 전체적으로 요약, 종합하고 研究의 限界 및 향후 研究方向에 대해서 제안한다.



## 第 II 章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역사적 배경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는 매우 특수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인식되어진다. 주로 배타성·고립성·변방성 등으로 설명되는 특수성은 한반도 중심사관과 역사의 동태성을 무시한 정태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는 항쟁의 땅이다. 서기 662년, 신라 입조로 탐라가 신라에 복속된 이후, 탐라는 계속되는 중앙봉건정부와 몽고, 왜구 등으로부터 그리고 한말에는 제국주의의 열강들과 그에 이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4·3 항쟁의 와중에서 미군과 반민주세력들에 의해서 끝없는 침탈을 받아온 수난의 역사로 점철된 땅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을 변방 특유의 공동체 정신으로 뭉쳐, 항쟁으로 이겨내 온 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주인들은 어려움을 견뎌내는 생활철학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제주인들에게는 고난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심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20세기 냉전시대에 4·3과 같은 대참사를 겪은 제주사람들이기에 평화에 대한 추구는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平和의 섬’ 구상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제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제주가 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第 1 節 역사적 맥락에서 본 제주의 평화

역사적으로 평화의 섬 구상의 근원은 제주의 평화사상에 근거한다고 보여진다. 탐라 시대 고양부 삼성가족체제로 출발하여 작은 영토이면서 해양지역이라 실용주의 철학과 이웃과의 평화적인 공존 속에서 섬의 평화사상을 키웠으리라고 추정된다. 고려시대부터 나라에서 하나의 군으로 정치적 위상이 추락한 이후, 오히려 지역

의 평화적 존립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었다. 고려시대 대몽고와의 삼별초 저항을 도와준 도민의 마음, 1901년 불란서 천주교와 관료의 조제포탈에 맞섰던 이재수 장군주도의 항쟁에서 제주도 사람들의 억울함을 말하고자 하였던 그 마음, 1932년 해녀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저항했던 도민들의 마음, 미군정시대의 정책에 도전했던 4·3 항쟁과 그로 인한 대 수난의 역사적 흐름에 공통점이 있다면 섬사람들 나름의 평화를 지키려는 평화사상이었다.<sup>9)</sup>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하고, 주기적으로 반란이 있어왔다. 이 섬은 고려 말까지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미치지 못했으며, '탐라'라는 독립국으로 본토와 느슨한 민족적 관계를 유지했다. 13세기, 고려가 몽고족에 침략 당했을 때 이 섬은 원제국 침입자에게 저항하는 최후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정복된 후, 제주도는 몽고군 행정부 아래에서 말을 기르는 목초지로 변화되었다. 한 세기 동안 원제국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이 계속되었으며, 후에 고려왕조가 다시 지배하려할 때 이에 저항했다. 이씨 조선왕조의 전 기간에 걸쳐 이 섬은 나라의 정치와 떨어져 침체되고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었다.<sup>10)</sup>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제주도가 중앙의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취급되어졌다. 제주도는 인물의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양오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갔다. 더욱이 17세기 인조대로부터 내려진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이 19세기 초까지 2백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제주 사람들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였다.

변방으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설움을 느꼈던 제주 사람들에게 바다는 격절(隔絶)의 공간이었고, 제주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 이 섬의 고립과 정부에 의한 무시는

---

9) 고창훈, "평화섬 정책의 근거들과 실천논리 : 남북통일을 위한 6개국(2+4) 평화섬 조직위 유치를 중심으로", 『섬과 대륙의 공명 : 그 하나됨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주대학교 섬 연구소, 국제학술회의발표자료, 2000), p. 4.

10) 노민영, "제주도의 반란 - 존 메릴", 『잠들지 않는 남도 - 제주도 4·3 항쟁의 기록』 (청주 : 온누리, 1988), p. 19.



19세기 동안 여섯 번이나 발생했던 반란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연속적 반란이 1813년에 시작되었다. 관청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고, 주모자는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두 번째 반란은 1863년 주민들이 과중한 세금에 반대하여 일어섰을 때 있었다.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지방에서는 폐지된 시장세의 계속된 과세조치였다.

이 고요함은 1890년대에 섬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짐으로 해서 깨어졌다. 1891년 작은 봉기가 일어났다가 곧 진압되었다. 이로부터 5년 뒤,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간섭 하에 시행된 갑오개혁의 급격한 근대화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심각한 반란이 제주도에까지 밀어닥쳤다. 이 소요 속에 처음으로 반외세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8년 방성철의 지휘 하에 탐관오리와 새로운 과세에 반대하는 세 번째 봉기가 발생했다. 반란민들은 진압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관청을 불태우고 관리들을 괴롭혔다.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난 1년 후인 1901년 봄, 마지막 가장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sup>11)</sup>. 바로 '이재수의 난'이다. 특히 '이재수의 난'은 천주교회 세력의 비리에 저항함으로써 포교를 담당하던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다.

광무 5년(1901년) 전도에 걸쳐 천주교도와 도민간의 무력으로 충돌한 '이재수의 난'은 일명 천주교의 난(天主教亂)이라고도 한다. 이 사건 기간동안 제주도에서는 대다수의 카톨릭교도들과 도민들이 무력 충돌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목숨을 잃어갔다. 지방관리들의 보고에 의하면 시 외곽지역에서 두 주간에 걸쳐서 하루에 4~50명의 기독교도들이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또 어떤 날은 이들 동안 500명이 넘게 학살될 정도로 양측의 사소한 싸움이 급속히 확대되어 엄청난 충돌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sup>12)</sup> 이러한 반란은 서양세력의 직·간접적 영향아래 전통적 사회의 사회, 정치, 경제 구조를 급격히 개혁화 하려는 데에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일어난 반란의 일부분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개혁정책들이 제주도에서처럼 주민들로 하

---

11) 노민영, 앞의 글, p. 20.

12) 유흥렬,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역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62), p. 379.



여금 거칠고, 공격적 경향을 촉발시킨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고립, 무거운 과세, 카톨릭선교사·신도 등 제조건으로 인해 봉기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참다 못한 제주 사람들은 조선왕조 말기에 여러 차례 민란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1862년 ‘강제검(姜悌儉)의 난’, 1898년 ‘방성칠(房星七)의 난’, 1901년의 ‘이재수(李在守)의 난’ 등 중앙 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던 대규모 민란이 작은 섬에서 터져 나왔다. 이러한 민란을 통하여 제주 사람들은 부정과 수탈에 정면으로 항거하는 저항정신을 키워나간 것이다.<sup>13)</sup>

고려로 편입된 이래 최근까지만 해도 항상 변방지로 남아 있어야 했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온갖 침략을 겪어야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항상 중앙의 관심에서는 멀리 있는 변방이었고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제주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앙의 관심 밖에서 원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조선시대에는 겨우 중앙에서 쫓겨난 관리들의 유배지일 뿐이었고, 말을 길러 바치는 방목장일 뿐이었다.

근대시민국가 이전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수탈을 목적으로 한 신분제에 의한 계급 체계이다. 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하여 다수의 피지배계급은 수탈 당하는 사회인 것이다. 고대에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은 바로 피지배계급과 영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말할 여지가 없다.

독립적인 초기국가(군장국가, chiefdom)의 제주도가 1105년 고려의 일개 군현으로 전락한 이후 중앙지배권력의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중앙의 지배권력에게는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다.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억압은 더욱 강화되는데, 토착민을 통한 간접통치와 담보로서의 인질제도에서 점차 자치성을 없애고 행정구역화하여 직접통치제로 전환하는 것도 거기에 기인한다. 또한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 왕토(王土) 사상에 입각하여 제주의 땅은 극히 적은 사유지를 빼고

13) 강창일, “제2장 4·3의 문명사적 스펙트럼”, 『(가칭)제주 4·3 위령 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제주발전연구원, 중간보고서(요약본), 2001), p. 16.

서는 모두 국유지화 하는 조치도 바로 그것이다.

제주도는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중간통치 관리에게 많은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중앙의 감독·통제도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관리에 의한 자의적 수탈이 횡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배권력에 의한 구조적 수탈과 자의적 수탈의 심화는 도민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경제투쟁을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한다. 이 정치투쟁은 반권력 투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은 수탈만을 일삼는 외지 세력인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이었다. 게다가 조선의 봉건지배 계급은 항상 제주도를 소요가 많은 '다스리기 힘든 섬'으로 규정하여 끊임없는 학정과 폭압을 가했으며,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굶주림에 지친 도민은 살기 위하여 지배자에 대해 저항하였으니, 제주도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라고까지 말해질 정도이다. 옛부터 정치범의 유배지로 알려져 왔으며 행정상으로도 분리된 섬으로, 잊혀져 버린 것이 많은 비극의 섬이기도 하다.

일제 통치하의 제주도는 왜구에 의한 수탈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에 의한 수탈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일제가 한국 정복을 마무리짓자 즉시 섬의 해산물과 사냥감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즉 일본은 고종 5년(1863년)에 자신들의 기계화된 어선(漁船)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연해까지 침입하여 불법 어획을 일삼았다. 또한 그들은 고종 13년(1876년) 병자 수호조약 이후 정치적 배경을 이용하여 불법 어획을 자행하였다. 이처럼 제주도는 육지부와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을 거의 동등하게 받아 왔으며, 그에 대한 반발과 저항 역시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섬사람들은 이러한 수탈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집요한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도민의 반일 투쟁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1932년에 있었던 세칭 '구좌면 해녀 투쟁'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투쟁은 1930년대의 조선어업노동자의 투쟁사에서 그 전형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인들 사이에는 이 해녀투쟁의 진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 해녀운동의 원인은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침탈과 더불어 제주도에 대한 어업 침탈이 수행되었다. 당시 일본 어업인들은 잠수기업자들을 동원하여 제주도 어장의 전복과 해삼류를 남획하여 갔다. 그 결과 1890년대 이후 제주도의 어장은 황폐화되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도의 해녀들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타지역으로 출가노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제는 제주도에서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조직의 혐의를 씌워 다수의 청년들을 구속하였다. 결국 일제는 해녀투쟁 사건을 당시 제주도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을 대거 검거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후 구좌면 청년들의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게 해녀투쟁 배후 조종의 혐의가 씌워지지 않고, 공산당 재건운동에 관여한 것만이 문제시되고 있다. 결국 일제는 제주도 항일운동 세력들을 공산당 재건운동을 시도한 것으로 몰아붙여, 그것을 구실로 항일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931년부터 1932년 1월까지 지속되었던 제주도 해녀투쟁은 구좌면 하도리·세화리·연평리·종달리, 성산면 시흥리·오조리 등지의 해녀들을 비롯하여 연 인원 17,130명의 참여와 대소 집회 및 시위 횡수 연 238회에 달하는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의 횡포에 저항하였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항일 민족해방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 운동의 저변에는 소위 청년 민족운동가들의 활동 조직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운동을 단순한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항일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세력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단지 해녀들만이 아니라 지역 청년, 일반 농민층도 가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녀투쟁은 초계층적인 운동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사건의 여파가 제주도 전 지역으로 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전도민적인 항일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시대에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항일운동 가운데 여성운동과 어민투쟁의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해녀투쟁은 단순히 구좌면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 역사적 의의가 드높은 '제주도 해녀 항일운동'으로 명명하여야 할 것이다.<sup>1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반란과 저항이 있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제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당시 제주에는 '평화'가 결여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인 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증폭하게 되었고, '이재수의 난'과 제주 '해녀 투쟁'을 통해 제주인들 스스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논의는 이러한 제주의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第 2 節 4·3사건과 제주 '평화의 섬'구상

제주도의 '4·3 사건'은 지금까지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어 최소한의 사실조차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다. '4·3 폭동'내지는 '4·3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은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낳은 해방 후 최대의 민중항쟁이요 사건이었다. 게다가 한국 현대사 최초의 비극인 제주 4·3은 비전쟁 상황에서 유래가 드문 수만 여의 '민간인 학살'을 불러온 비극적인 야만의 역사였다.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 일련의 무장대가 제주도의 11개 경찰지서를 습격함으로써 촉발된 정부군과 무장대 간의 무력충돌 사건으로 이 무력 대결은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4·3 사건 발생 이후 40년이란 긴 세월기간 4·3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어 왔다.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의 지속적 집권과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치사회화 현상은 4·3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학술적 논의까지도 불가능하게 했다. 오로지 4·3

---

14) 박찬식,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 『濟州海女抗日實錄』, (제주:봉화인쇄사, 1995) pp. 92-94.

에 대한 조각난 기억들만이 억압적 국가체제 아래에서도 구전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고작해야 현기영의 「순이 삼촌」 등 문학적 수단을 통해 4·3의 아픈 기억들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4·3 사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 비극의 진실규명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자리잡게 되었다.<sup>15)</sup>

4·3 사건의 발발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세계사적으로도 '4·3 사건'처럼 미묘한 사건은 드물기 때문이다. 존 메릴의 논문 「제주도의 반란」에서도 “전후 점령군에 대하여 제주도에서와 같은 격렬한 대중적 저항이 분출된 일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표현으로 그 특수성을 함축하고 있다.

해방 후의 '4·3 사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의 '자기표현'의 비극적 저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군정기·정부 수립 직후에 발생한 제주도에서의 주민학살에 대한 문제는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제주 4·3 특별법에서도 진상조사를 병행할 것을 명시하였지만,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인간적 만행인 제주주민 집단학살(Genocide)은 아직도 밝혀져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제주인들에게 '4·3'은 되새기고 싶지 않은 처절한 비극적 사태이다. 제주인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자존과 저항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4·3'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4·3'은 20세기뿐만 아니라, 전체 제주역사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4·3'의 진실 규명은 전체 제주역사의 복원이며, 제주인들의 정체성(正體性)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대선에서 4·3 사건의 진상규명의 논리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4·3의 진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제주 4·3 사건은 1992년의 대선 1995년의 지방선거와

---

15) 문정인, “제주 4·3의 정치적·미래적 맥락과 공원조성에의 함의”, 『(가칭)제주 4·3위령 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제주발전연구원, 중간보고서(요약본), 2001), p. 55.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을 거치면서 진상규명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1999년에 4·3에 진상규명의 국내적 단초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는 4·3 사건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제주가 평화로운 지역이 아닌 희생과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점철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냉전시대에 '4·3'과 같은 대참사를 겪은 제주사람들이기에 평화에 대한 추구는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평화의 섬' 구상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4·3의 상흔과 명예 때문에 영원히 좌절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비극과 아픔은 오늘과 내일의 참되고 보람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21세기 제주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것만이 4·3의 원혼들을 위로하고 번영과 평화의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할 수 있다. 4·3 사건은 이와 반대의 전쟁과 혼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준다. 낮에는 토벌대의 위협, 밤에는 무장대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신뢰는 상실했는가 하면 많은 수의 주인들이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었다.

'평화의 섬' 만들기의 근본취지와 의의는 「4·3」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메카가 되면서 제주의 발전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에 있었다. 물론 '평화의 섬' 만들기는 90년 초 한·소 정상 회담이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보다도 우리 제주야말로 역사성, 자연조건, 지리적 위치 등에서 평화의 섬의 위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곳이라는 검증은 토대로 한 발상이었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지난 10여년 간 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고도 꾸준하게 연구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sup>16)</sup>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99년 12월에 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道를 세계 평화

---

16)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1991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미 하와이대 마즈나가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태평양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부터다.

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52조).”는 조항을 넣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제주도민들의 ‘平和의 섬’ 만들기가 새로운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게 하는 데에도 일조를 담당했다고 제주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가 남북화해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제주인들이 경주해온 ‘平和의 섬’ 만들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냉전과 분단이 낳은 질곡인 4·3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그 구체적 대안 중의 하나가 제주 ‘平和의 섬’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4·3의 해결을 통한 도민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第 III 章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형성요인

### 第 1 節 國際的 요인

#### 1. 지정학적 위치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해역은 통상적으로 東中國海(the East China Sea)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보다 넓게는 中國海(the China Sea)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북쪽의 한반도로부터 남쪽의 싱가포르에 이르는 아시아 대륙의 東岸과 일본 열도·류큐열도·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및 수마트라 섬을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있는 바다를 보통 중국해라고 부르며, 대만해협을 경계로 이를 남·북으로 나누어 북쪽을 동중국해, 남쪽을 南中國海(the South China Sea)라고 부르고 있다.

동중국해인 동북아 해역은 제주도 및 한반도 남단과 중국의 양자강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한반도와 중국 동안 사이의 바다인 黃海(the Yellow Sea), 남쪽으로 대만과 한반도 사이의 바다인 협의의 동중국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東海(the East Sea),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동부와 캄차카 반도 사이의 오희츠크해(Sea of Okhost)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북아 해역에 속하는 4개의 바다 중 오희츠크해는 사실상 러시아의 內海로 간주되고 있으나, 나머지 3개의 바다는 그 주변국들 사이에 주요한 해양 항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또한 군사활동을 위한 주요 무대로 활용되는 등 戰略的·安保的 利害關係의 표적이 되어왔다. 한편 동북아 해역은 동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淺海의 大陸棚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어족자원이 풍부한 漁場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대륙붕 석유의 탐사·개발 그리고 어로활용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곳이다. 동북아 해역은 그 면적이 그리 넓지 않고 주변국들에 의하여 거의 둘러싸이고 있는 半閉鎖海(semi-enclosed sea)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각국의 管轄水域間의 海洋境界劃定 문제와 해양오염 방지 내지 해양환경의 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 특히 요구되는 해역이기도 하다.

동북아 해역은 최근의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아직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립·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에 속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자본주의 경제와 통제적 계획경제 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북한이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와 중국과 대만이 마주보고 있는 대만 해협에는 심각한 긴장상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평화의 구축 및 지역안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sup>17)</sup>

제주도는 바로 이러한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중국대륙·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이들의 관심 지역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이나 간섭을 받아왔다.<sup>18)</sup> 외적의 침입과 외세의 간섭으로忍苦와 受難으로 점철된 제주의 역사는 일찍이 高·梁·夫 三族의 氏族中心의 사회로부터 시작되었고, 고려시대에는 북방에서 오는 몽고군의 침략을 막고, 반격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 일본 왜구의 침략도 끊이지 않았다.<sup>19)</sup> 그리고 일제시대 제

17) 신행철·고성준 외, 『환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전략 : 기본구상』 (제주도, 1995.12), pp. 24-25.

18) 고성준, “自衛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학 탐라연구소, 1979), pp. 121-144 참조.

국침략기에는 75,000명이나 되는 일본 관동군의 병참기지가 되어야 했고, 일제패망과 함께 상륙한 미군에 의해 제주 요새화가 기도되기도 했던 바 있다.<sup>20)</sup> 해방이후에도 제주는 세계 냉전체제로의 재편과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4·3사건'을 겪음으로써 많은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제주도가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가 관광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이다. 이것은 지나온 과거에 비한다면 제주도의 획기적인 위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륙문명시대였기에 섬에 대한 인식은 계속하여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 역시 섬은 해양시대에 빛을 발할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제주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동안 겪어야 했던 침략과 간섭의 역사를 잊어서도 안되며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지금 불고있는 세계적 탈냉전의 기류가 동북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해빙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80년대 동안 미국은 상당히 강력한 해군력을 동아시아에 유지시켜 왔고 아직까지도 그 해군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에게 계속해서 소위 재래식 무기군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갖고있는지는 더 두고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그리고 일본이 군사대국으로서 가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냉전종식 이후에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제간의 교류협력과 경제협력도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제주도의 위상과 지리적 이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지경학적으로 볼 때,

---

19) 倭賊의 침입은 고려시대에 5회,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太宗 때에 5회, 명종 때에 4회나 계속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뒤 각 王代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近 300년간 계속되었다. 고성준, 앞의 글, p. 130.

20) 고성준, "통일시대의 전개와 제주도",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6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5), p. 68.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동북아경제권으로 결합시키는 고리이면서 동북아경제권과 동남아경제권을 연결하고 또한 동북아경제권과 서태평양경제권의 연계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동북아 해역의 도서들 및 동북아해역 연안 지방자치체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 나아가 환태평양 역내 교류 및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홍콩차이나 이후의 홍콩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이고 해양시대라고 얘기되고 있다. 대륙시대와는 달리, 해양시대에 있어서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첨병으로, 21세기적 해양일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섬이다.<sup>21)</sup>

이상과 같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정·지경학적 위치, 그 동안 구축해온 평화의 섬 이미지,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해양시대를 고려할 때, 한국이 동북아의 발전과 평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제주로 하여금 세계 평화의 섬으로 역할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는 대외적인 면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 지향적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입지적 대표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2. 냉전의 종식과 한소정상회담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와 91년의 소련 붕괴와 더불어 유럽에서 냉

21) 고성준·강근형,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8집 (1997), pp. 43-44.

전은 막을 내리게 되고 탈냉전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1991년 4월 제주에서의 한·소 정상회담은 21세기로 가는 동아시아 구조 변동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다. 즉 걸프 전쟁으로 주춤했던 세계질서의 탈냉전 경향이 이제 세계의 유일한 냉전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립되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련의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의 냉전의 현장이며 반공국가인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를 상징적으로 뜻한다. 북한 역시 일본과의 조기 수교를 서두르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성을 띄는 등 외교에 있어 탈 이데올로기의 양극화에 따른 진영간의 대결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한-일본-중국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연안 국가들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처하고 있는 제주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제주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 구축에 중심고리를 역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한편,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새롭게 클로즈업되는 계기가 된 것은 역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하면서이다. 지난 '91년 한·소 정상회담은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고양시켜 주었다. 제주만이 안고 있는 역사성, 자연조건, 지리적 위치 등은 국제평화를 가져다 줄 장소로 부각되었다.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는 한마디로 냉전시대를 청산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해 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탈냉전의 새로운 화해와 개방의 흐름이 얼마나 급격하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하였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1991년 4월 20일 제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2차 대전 후 45년 넘게 계속되어온 한반도의 냉전상황

22) 『제민일보』, 1991년 4월 19일자 참조.

이 끝내기 단계에 돌입했으며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의 땅 한국에도 화해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일깨워 준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냉전의 한쪽 주역이었던 소련의 국가원수가 남북한을 통틀어 처음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군사적 대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도 화해의 훈풍이 불어 대결과 단절, 전쟁의 위협 등 냉전의 유산이 급속히 청산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회담이었다.

한소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주이다. 「알타」, 「포츠담」, 「몰타」 등이 그러했듯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주가 국제사회의 명소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sup>23)</sup> 최근의 국제정치에서 정상회담의 추세를 보면 수도가 아닌 곳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알타체제 곧 냉전체제의 종언을 선언한 1989년의 미·소 정상회담이 「몰타」란 섬에서 열린 것도 같은 경우이다. 그러니까 제주는 한국이나 소련 모두에게 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점점 더 국제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지중해의 조그만 섬 몰타가 미·소 정상회담 장소로 유명해졌듯이 제주도도 반드시 유명해질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몰타가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간이라면, 제주도 역시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지역이기 때문이다.<sup>24)</sup>

이처럼 태평양 해양시대의 도래와 관련, 이제 제주를 더 이상 한반도의 부속도서로만 간주할 수 없다. 제주는 동북아의 구심점이요, 태평양이란 「연(鰲)」의 목줄이다. 한소정상회담은 제주가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들을 우회적으로나마 반영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제주를 정상회담 장소로 채택하게 된 배후에는 제주도의 非이데올로기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여기서 「非이데올로기」적 분위기란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가지 이들이 간파치 못한 것은 대규모 군사기지의 유무를 떠나 제주도가 평화의 원초적 원형을 역사적 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사회의 사회 구조적 성격은 「삼무

23) 『제민일보』, 1991년 4월 18일자.

24) 『제민일보』, 1991년 4월 20일자 참조.

(三無)」로 요약된다. 거지, 대문, 도둑이 없다는 것은 바로 착취와 공포, 그리고 위협이 없는 자연적 평화의 원형을 의미한다. 이는 제주사회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 구축에 중심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한소 정상회담의 제주 개최 의의도 이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sup>25)</sup>

특히,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간의 제주에서의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탈냉전의 상징성을 갖게 됨으로써 제주가 단순한 국제관광지역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꽃피울 수 있는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제주를 '평화의 메카'로 만들자는 원대한 꿈이 서려있다.

그리고 제주 '평화의 섬' 구상 자체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화해의 국제질서와 관련된다. 1980년대 말에 시작된 동유럽과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기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냉전구조가 급격히 무너지는 가운데, 90년대 초에 제주도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소 정상회담은 동북아 질서도 화해와 평화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전초였다. 특히 동북아 질서의 화해의 전초가 제주에서 마련되었고, 이후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의 제주 방문이 잦아졌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그야말로 제주가 동북아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이러한 화해의 시대를 간파한 뜻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도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1991년 4월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주 방문으로 이루어졌던 한·소 정상회담과 1996년 4월에 클린턴 대통령의 제주 방문으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은 제주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구축에 지정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강택민 중국 국가원수의 제주 방문도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장소로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1984-1999년까지의 4.3 진상규명과 평화추구 운동이 결합되었고, 그것은 1989년에서

25) 『제민일보』, 1991년 4월 18일자 참조.



1993년까지의 “제주형 개발철학의 정립운동” 등의 논의를 거친 후에 1999년 제주개발특별법의 평화의 섬 지정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sup>26)</sup>

한소 정상회담을 비롯한 몇 차례의 정상회담이 제주로 하여금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평화의 섬’에 대한 논의와 구상의 제시가 본격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소 정상회담 등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우리의 ‘평화의 섬’ 논의와 구상은 단순히 시대적 조류를 따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지한 것이었다고 본다.

## 第 2 節 國內的 요인

### 1.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제주 ‘평화의 섬’ 구상 자체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남북화해 질서와 관련된다. 오늘날 세계 조류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문호를 개방하여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한반도 또한 이러한 조류의 예외지역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다.<sup>27)</sup>

---

26) 고창훈, 앞의 글, p. 4.

나아가 햇볕정책은 북한을 끌어안는 평화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탈냉전의 국제 정세에도 부합되며, 특히 포용정책을 추구해 온 미국 등 우방과 정책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햇볕정책의 당위성은 북한을 고립,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 교류를 증대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은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적 세계화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더 이상 남·북한 양측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 없이는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때 획기적인 민족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정상회담의 결과인 6·15 선언 또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후속 회담으로 이어졌고, 남북대화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어왔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1년을 통해 남북관계는 과거의 대립·갈등관계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대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역사의 큰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되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 자는데 합의하였다. 현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당장의 통일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정상회담 이후 한국내에서는 평화적인 분위기가 확대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제주 '평화의 섬'은 그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논하는 장이 되고 있다.

---

27) <http://www.supertiger.pe.kr/text12/햇볕정책.htm>



지난해 8월 31일에 끝난 제2차 장관급 회담과 제3차 제주에서의 국방부장관회담은 우리 제주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제주의 위상을 '平和의 섬'으로 끌고 가려 했는지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주 '平和의 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논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주 '平和의 섬' 구현은 새로운 동북아의 긴장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고 동북아 평화구축에 이니셔티브를 펼 수 있는 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平和의 섬' 구상의 주체였던 제주인들의 역할과 과제는 더 커지고 있다.

## 2. 남북화해질서와 제주 '平和의 섬'의 가능성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냉전의 마지막 孤島라 할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탈냉전으로의 이행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최고정치지도자들 사이의 정치적 타결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전환의 급격성에 있다고 하겠다.

탈냉전의 계기가 먼저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은, 위에서부터 시작한 탈냉전이 우리사회의 여러 수준, 즉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이념적 측면을 포함하는 사회전체의 수준에서의 이행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탈냉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 탈냉전은 전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연 2000년의 동아시아 정세는 상반되는 두 가지 흐름이 교차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분단 50여 년을 지속하면서 대결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온 남북한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과 그 결과로 발표된 '6·15 선언'은 기존의 남북한 질서를 뒤엎고 통일로 향하는 역사적인 새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조성된 남북화해무드는 북측대표단의 제주 방문

등을 통한 제주도민들의 교류협력의 기대심리가 무르익으면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담 등이 제주에서 개최되는 등 제주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급격히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질서가 다시 한번 평화시대 제주의 역할 정립의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서 제주도의 발전 가능성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안의 맥락에서 볼 때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회담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第 3 節 道內的 요인



#### 1. 관광, 감귤 산업의 침체

제주도는 '80년대 이전에 자연경관 하나만 가지고도 신혼 여행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IMF 금융위기를 겪은 후유증 이후 제주도의 특화산업인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이 최근 생산효율성, 경쟁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는 WTO 조적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감소된 제주도로서는 현재 긴박한 위기감을 맞보고 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97년에 436만 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98년에는 329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관광수입도 1조 750억원에서 9,558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도 수입개방, 국내 과일소비의 한계, 해거리 현상으로 성장의 한계를 맞보고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위기상황은 IMF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원인 이외에도 최근 관광산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제관광지로서의 실제 이미지가 떨어져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관광지와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여 발생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sup>28)</sup>

한편,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농산물 조수입의 60% 내외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IMF한파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감귤 소비 역시 둔화되고, 가공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감귤산업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은 국내수요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향후 감귤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1997년 7월 1일부터 오렌지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제주에 있어서 기간산업인 감귤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요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생산농가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금년은 해결이 현상으로 76만톤 이상의 대풍작이 예상되면서 감귤산업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 농업발전의 견인적 역할을 하는 감귤산업의 침체는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제주도 농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sup>29)</sup>

그 동안 오렌지 수입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귤수출량은 1천톤 내외로서 물량면에서 정체되고 그리고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 원인으로 생산농가의 수출인식 부족, 적극적인 시장개척의 미흡, 수출물류의 낙후, 수출경쟁력의 저위, 수출지원체계의 미흡 등을 들 있다.<sup>30)</sup>

1999년도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소비위축과 해결이 현상에 의한 대풍작으로 과거 '89년도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최악의 가격 폭락이 재현되었다. 따라서 '99년도는

28) 안영훈,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방송인클럽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0), p. 60.

29) 김경택, “감귤수출의 경제적 효과 및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연구논총 제9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1998), p. 2.

30) 김경택, 앞의 글, p. 2.

제주감귤산업이 대란을 겪은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2000년산의 경우도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물론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관광시장, 그리고 감귤산업의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도는 근본적인 대응전략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유지역 조성 등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평화의 섬' 지정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국제교류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평화의 섬'에 기반을 둔 국제화,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2. 송악산 군사기지 문제



제주 '평화의 섬' 논의가 1988-89년 송악산 군사지역의 반대 운동에서 시작하여 1991년 9월 학계의 논의로 이어져 나간다. 송악산 군사기지 문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는 원래 이 곳 주민들의 땅이었으나 일제시대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인 군비행장으로 만들면서 강제로 뺏겼고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또다시 강점된 도민의 한과 설움이 사무친 곳이었다. 6.25 전란의 와중에는 육군 제1훈련소와 공군비행장으로 사용됐고 군비행장 기능이 사라진 이후에도 부지 62만평은 국방부 소유 땅으로 관리되면서 일부가 인근 주민들에게 임대돼 경작지로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이 땅의 환원은 주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었다.

그나마 제주도 당국이 1985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송악산 일대

19만여평에 80억원을 투입해 1991년까지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은 군사지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1987년 11월27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가 서귀포에서 열린 선거유세를 통해 62만평의 송악산 군비행장 중 군에서 활용하지 않는 48만평을 원소유자와 기존 임대자에게 불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주민들을 설레게 했다.<sup>31)</sup>

이 같은 공약을 매년 군 당국에 각서를 쓴 후 38만여평을 임대해 경작해오던 372명의 주민들과 원주인들은 군비행장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환영했다. 모슬포 주민들 역시 미군 레이더기지와 군비행장 때문에 낙후됐던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에 비로소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987년 4월29일 군 전력 증강계획상 송악산지구 관광개발계획은 불가하다며 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요구한데 이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1987년 12월28일 송악산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렸다.<sup>32)</sup> 심지어 군 전력 증강을 이유로 기존 송악산 군비행장 부지 62만평의 3배가 넘는 모슬포일대 200만평을 충북 해미, 충남 서산, 경북 중원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었다. 또 국방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 4개월이 지난 1988년 5월6일에야 제주도 당국에 통보하면서 송악산지구에 대한 행정관서의 허가 사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계 군부대와 협의 후 시행하라고 못박았다.

## 2) 도민 저항의 흐름과 결과

군 당국의 송악산 군사기지화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대정·안덕지역 주민들을 사실상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공군 비행장이 들어서면 활주로를 중심으로 반경 7km내의 모든 땅과 건물은 군 보호구역에 포함돼 대정, 안덕 등 인근 마을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볼 절박한 상황

31) 『제주신문』, 1987년 11월 27일자.

32) 『제주일보』, 1989년 3월 4일자.

이었다. 강제수용을 피하더라도 지가 하락, 비행기 소음, 공군기지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은 어장을 황폐화시켜 주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기지촌이 형성됨으로써 제주인의 전통적인 삶의 문화 자체 파괴가 쉽게 예상됐다. 더욱이 송악산 군사기지화는 미군의 핵기지화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도민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강화하는 지역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군사기지 완전 백지화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운동을 조직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1988년 8월21일 가장 먼저 대정읍 청년들이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 반대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양영운)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모슬포지역 이장들도 나서 모슬포비행장 설치 결사 반대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우영진)를 결성했다. 또 민주쟁취 국민운동제주본부 등 도내 민주재야단체가 8월29일 송악산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배경 등 4개항을 정부에 공개질의하며 포문을 열었다.<sup>33)</sup> 9월26일에는 대정교에서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결의대회가 처음으로 열려 공약을 어긴 노태우 정부를 규탄했다.

상모1리 및 상모3리, 동일리 등 대정지역 주민들이 마을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안덕면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군비행장 결사 반대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이와 함께 도내 민주, 재야, 종교단체를 총망라한 송악산 군사기지 절대 반대 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영수 등)가 10월 중순 결성되고 재경 도민들도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로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켜갔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국방부의 송악산 공군기지화계획이 향후 필리핀 주둔 미공군 클라크 기지의 제주도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방성과 노태우 정부를 압박했다. 마침 10월과 11월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시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재확인시키며 노태우 정부의 공신력을 공격했다.

송악산 군사기지화 완전 철회에 자신감을 가진 도민들은 10월16일 대정교에서 열

33) 『제주신문』, 1988년 8월 30일자.

린 도민결의대회에 마을별로 '반대 반대 모슬포 군비행장 결사반대'가 적힌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참여해 2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 집회로 도민여론을 감지한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10월17일 개최할 예정이던 지역주민협의 및 설명회를 취소한데 이어 여당인 민정당도 정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sup>34)</sup>

오자복 국방부장관은 10월29일 송악산 군사시설은 필리핀 주둔 미공군기지의 이전과는 무관함을 강조<sup>35)</sup>하고 11월2일에는 미국방성도 미공군기지의 제주 이설은 낭설이라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0월30일에는 도민대책위 주최로 제주북교에서 도내 20여 개 재야 민주 사회단체 소속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또 공화당의 제주 출신 김두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단이 11월4일 제주를 방문, 대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방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1월5일 송악산 군사기지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후 12월7일 공군본부는 기존 군사보호구역 62만평 중 17만평을 해제해 주민에 불하하고 추가 지정했던 100만평 중 50만평을 해제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sup>36)</sup> 이에 대해 도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12월18일 안덕중에서 대정, 안덕 관내 22개리, 교회, 학교, 농협 등 32개 지역, 단체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쫓겨대회를 개최하고 완전 백지화 요구를 꺾지 않았다.

결국 강영훈 국무총리가 1989년 3월2일 송악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백지화 선언을 함으로써 송악산 관광개발계획은 2년여만에 원상회복 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보호구역해제를 하지 않던 국방부는 1991년 7월30일 제주에 새 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송악산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송악산 문제는 군사기지화가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

34) 『제주신문』, 1988년 10월 17일자.

35) 『제주신문』, 1988년 10월 29일자.

36) 『제주신문』, 1988년 12월 7일자.



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를 3년 10개월 간 지속하다가 제14대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타결됐다. 국방부가 1992년 12월12일 송악산 군사시설보호구역 200만평중 국유지를 제외한 138만평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범도민 운동의 결과는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민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음을 인식시켜주고 자신감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됐다.<sup>37)</sup>

이처럼 송악산 군사기지 문제는 제주도민의 생존권 문제와 동북아 평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민들에게 대규모 군사시설을 모슬포지역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으며 제주 '평화의 섬' 논의를 함에 있어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7) 『제주일보』, 2000년 1월 8일자.



## 第Ⅳ章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분석

제주 '평화의 섬'의 개념과 모형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지난 91년 처음으로 '평화의 섬' 구상을 제시했던 문정인, 고성준, 양영철 교수 등은 첫째, 제주도의 비무장화, 둘째 평화와 질서를 위한 중심지화, 셋째,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센터화,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 넷째, 평화의 섬을 행동화하는데 능동적이고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제주도민, 다섯째, 평화의 개념과 일치하는 균형적·분권적·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장소로 개념화한 바 있다.<sup>38)</sup> 이후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거니와, 비교적 최근(98년)에 다시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의 섬' 모형의 유형을 제시한 김부찬 교수는 첫째,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지대 모델, 둘째, 경제특구화를 통한 평화·번영·복지의 섬 모델, 셋째, 학술·문화·관광 차원에서의 평화의 섬 모델 등을 제시하였다.<sup>39)</sup>

이러한 '평화의 섬' 개념과 유형을 토대로 하여 99년에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는 제주 '평화의 섬' 모형을 ① 복합모형, ②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구현(내생적 개발과 평화 추구 적인 제주 지역개발을 통한 이상적 복지공동체 사회의 구현 모형), ③ 경제특별구화(지역경제의 번영과 지역 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특별구화 모형), ④ 한정된 교류의 거점화(학술적 차원에서 평화사상을 전파하고, 제주의 전통적인 삼무정신과 연관된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 관광객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학술·문화·관광 차원의 모형), ⑤ 국제평화 구축의 중추 센터화(중립화 또는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지대 설정, 국제적 평화기구 유치, 분쟁조정 및 해결 센터 설치 등을 고려하는 모형)

38) 제주국제협의회, 『평화와 번영의 제주』 (서울: 신라출판사, 1993), pp. 231-245.

39) 김부찬,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의 설정 및 법·제도적 검토," 『제주 평화의 섬 모델과 추진전략 모색』,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워크숍 결과보고서, 1998), pp. 31-47.

로 상정하고, 이를 전문가들에게 “제주에 적합하고 이상적인 모형”(개념적 모형)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형”(현실적 모형)에 대해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제주에 적합하고 이상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복합모형(37.0%),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구현(25.9%), 경제특별구화(16.7%), 한정된 교류의 거점화(13.0%), 국제평화 구축의 중추 센터화(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형에 대해서는 복합모형(35.2%), 경제특별구화(25.9%), 한정된 교류의 거점화(18.0%), 국제평화 구축의 중추 센터화(13.0%), 정의로운 복지 공동체 구현(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의 섬’을 구현하는 전략적 차원의 실천적 모형으로 ① 경제특별구화 모형의 구현 → ② 한정된 교류의 거점화 모형의 구현 → ③ 국제평화 구축의 중추 센터화 모형 구현 → ④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모형의 구현 → ⑤ 복합모형의 구현의 순서를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40)</sup>

이상에서 보듯이, 제주 ‘평화의 섬’의 개념과 모형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즉 그것은 복합모형에 합의된 대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동시에 구가하는 것이다. 다만 실천전략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미의 평화에 강조 점을 둔 모형을 먼저 할 것이냐, 경제적 번영에 더 강조 점을 둔 모형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듯 하다. 전자의 입장은 한마디로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발전과 번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자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미의 평화모형에 담겨있는 중립화 내지 평화지대화가 국가의 실정선 안에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최근 제주와 함께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인 것 같다.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이후 ‘평화의 섬’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와 민간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제까지 제기되어 온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40) 고성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외 환경과 제2기 제주 ‘평화의 섬’ 추진과제”, 『남북정상 회담과 동아시아 신질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신아세아질서연구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1), p. 63-64.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第 1 節 경제적 차원에서 본 제주의 번영과 개발을 위한 평화의 섬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정치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번영과 복지의 요소가 중시되는 '평화·번영·복지의 섬' 구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보다 획기적인 제주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으며, '제주 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ernational City)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국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간의 개방 및 협력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설득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고, 동북아경제권과 동남아 경제권,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간의 연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제주가 스스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 경제 협력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제주 '평화의 섬'구상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특구로서의 제주 '평화의 섬'은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국제물류기지의 조성 그리고 전도의 면세지역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구 혹은 국제자유도시화를 통해 제주의 평화·번영·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설정된 제주의 '평화·번영·복지 섬'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정비 지원과 더불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비무장·중립화'를 기초로 한 '평화지대화' 모델에 비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제특구화' 모형은 평화의 본래적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이 반드시 긴장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평화의 섬’구상과 ‘국제 자유도시’ 구상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모형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sup>41)</sup>

## 第 2 節 정치·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본 평화의 섬

동북아 국가 간의 이념적 및 군사적 대립 구도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주가 군사적 대립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예방하고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는 최소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립화란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한 국가행동의 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한 국제적 지위를 지칭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지위’란, 自衛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他國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條約에 명시된 중립의 지위를 손상시킬 어떤 조약의무도 지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서 관련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그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보장받는 永世中立國의 지위를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지위는 중립화될 국가가 중립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약속하고, 관련 강대국들 간에는 그 국가의 중립화에 대하여 합의하고 중립의 보장을 승인해 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립화의 지위는 자체중립화(self-neutralization)의 요소와 국제적 승인 내지 보장(international recognition or guarantee)의 요소가 함께 갖추어짐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립화란 특수한 국제적 지위의 설정을 통해서 국제분쟁의 예방, 회피 또는 종결할 목적으로 원용되는 일종의 국제체계의 세력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중립화의 고전적인 사례로는 스위스,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의 경우를 들 수 있고, 특히 2차대전 이후의 현대적 사례로는 오

41) 김부찬,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방송인클럽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0), pp. 27-28.

스트리아와 라오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중립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정지역의 국가에게서 조직화된 군사력을 박탈해 버릴 뿐 여타 국가들의 행동은 제한하지 않는 '비무장화'(demilitarization)가 있으며, 특정국가에 때에 따라 자의적으로 중립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제기되는 '중립주의'(neutralism)나, 또는 동서냉전 상황 하에서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을 표방했던 '비동맹'(Non-alignment)의 개념도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들은 중립화가 갖는 두 가지 속성 중 어느 한 요소만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들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추구할 수 있는 '평화의 섬'의 구체적 의미는 이상의 사례 중 어느 것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느 사례도 적용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위에서 보듯이 중립화의 대상지역은 주권국가이거나 아니면 주권은 없으나 국제적 분쟁이 예상되는 곳들로서, 주권국가 속의 어느 한 지역 내지 지방을 중립화했던 사례는 없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의 '평화의 섬'구상이 이런 것이라면, 제주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제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지방이기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구할 수 있는 '평화의 섬'이란 이상과 같은 중립화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홍콩과 같이, 노비자(No Visa)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또는 국제관광 도시이다. 또는 제네바와 같이,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세미나 및 연구센터 등의 설치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정치분쟁을 비롯한 앞으로 제기될 소지가 높은 경제분쟁, 해양분쟁 등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sup>42)</sup>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평화의 섬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自衛를 위한 무력을 제외하고는 비무장, 비군사화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평화의 섬' 개념이라면, 국제적 합의도출은 물론 한국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제주 '세계 평

42) 고성준, "동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한 관계: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제주국제협의회편, 『평화와 번영의 제주』 (서울: 신라출판사, 1993), p. 42.

화의 섬' 개념도 이러한 유형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상 낙원의 섬이라는 인식을 심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다.<sup>43)</sup>

제주를 '평화의 섬'화 한다는 것은 한국의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 제주의 지정·지정학적 위치는 다가오는 해양시대와 맞물리면서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섬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 간 이념적 및 군사적 대립 구도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주가 군사적 대립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예방하고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본래적 의미의 '평화지대'는 최소한 '비무장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상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이러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지대화가 주변국의 협력 내지 국제적 보장을 통하여 조성되고 이를 기초로 스스로의 평화를 구축하고 아울러 적극적 평화관에 입각한 평화 운동의 중심으로서 또한 지역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평화지대'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의 평화지대 모형을 제주에 적용·실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제주도는 독자적인 입법권과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제주의 중립화를 통하여 중앙 정부의 관할권에 많은 제약을 가해지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미 상호 방위조약, 휴전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관계적 법·제도의 제약이나 한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sup>44)</sup>

43) 『제주일보』, 1997년 12월 2일자.

44) 김진호,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념으로서의 평화의 섬," 『새천년, 새제주 - 백만 제주인의 힘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를 ‘평화지대’로 지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제한적 범위에서 지역적 분쟁해결이나 평화 관련 회의 및 회담의 개최를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 第 3 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본 平和의 섬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은 수난과 항쟁으로 얼룩진 제주의 역사와 평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삼무정신으로 부터 비롯된다.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이나 간섭을 받아왔다. 외적의 침입과 외세의 간섭으로 인고와 수난으로 점철된 제주의 역사는 일찍이 高·梁·夫 三族의 氏族中心의 사회로부터 시작되었고, 고려시대에는 북방에서 오는 몽고군의 침략을 막고, 반격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 일본 왜구의 침략도 끊이지 않았다.<sup>45)</sup> 그리고 일제시대 제국침략기에는 75,000명이나 되는 일본 관동군의 병참기지가 되어야 했고, 일제패망과 함께 상륙한 미군에 의해 제주 요새화가 기도되기도 했던 바 있다. 해방이후에도 제주는 세계 냉전체제로의 재편과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4·3사건’을 겪음으로써 인구 20만 중 5만 명이나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sup>46)</sup>

한편 제주가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력간의 각축장

---

과 대응전략 -』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 제주국제협의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0), pp. 76-77.

45) 고성준, “自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연구소, 1979), p. 130.

46) 고성준·강근형,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8호,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1997), p. 47.

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세력의 완충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립지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섬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곳을 중심으로 고대 해양국가가 성립할 수 있었고, 대륙과 토지를 중시했던 중세 봉건시대에는 유배인의 땅, 지배와 저항의 변방으로 전략하기도 했다.

독립공간으로서 자체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제주사람에게 대륙과의 만남은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대륙으로부터의 침략과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주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주사람은 외부 세력의 지배에 대한 순응과 저항을 통하여 자기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순응과 저항은 기존의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려는 내재화된 제주사람의 외부에 대한 태도였다. 그러나 20세기 냉전 체제 하에서 제주사람들은 4·3이라는 작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거대한 힘에 의한 압살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 저항이 폭력에 의해 꺾이는 경험을 한 제주사람들은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채 20세기 절반을 살아왔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제주는 이제 ‘平和의 섬’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세기 전에 겪은 4·3은 이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평화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제정된 4·3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반세기 동안의 노력은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21세기 평화의 섬 제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sup>47)</sup>

다음으로 문화적인 제주의 삼무정신은 제주인의 평화사상을 잘 나타내 주는 정신이라 하겠는데,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제주의 전통적인 삼무정신에 바탕을 둔 전통적 평화공동체를 재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탐라의 정신문화는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탐라정신의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不敗, 強靱, 抗拒, 排他 등도 평화를 깨려는 의도에서라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의 수단으로 발달한 정신

---

47) 김진호, 앞의 글, p. 71.



으로 보아야 한다.

탐라정신이 평화 지향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적 전통으로 ‘三無精神’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기서 ‘三無’란 盜無, 乞無, 大門無이다.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다는 三無精神은 동서와 고금을 가릴 것 없이 온 인류가 바라는 바, 궁극적인 理想일 것이다. 예나 이제나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도둑과 거지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며, 大門 역시 이를 없애서 지낼 수 있을수록 좋은 일이다.<sup>48)</sup>

도둑이 없다 함은 범죄가 없는 정의사회, 곧 正義가 실현되는 밝은 사회를 뜻한다. 도민들이 한결같이 정직, 순박하며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은 제 능력껏 성실하게 처리하였지 남에게 기대려 하거나 불의를 저지르려 하지 않았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정직, 순박을 생명으로 삼았고 인간본연의 질서를 목숨처럼 존중하였다. 정직, 순박하게 살아가면서 질서를 생명처럼 존중하는 도민들의 생활의지의 바탕에는 인간 이하의 박대 속에서도 자아를 굽히지 않는 자강의 의지와 굽주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강력한 선비기질이 生活哲理로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터이다. 제 분수를 철저히 지킬 줄 아는 安分の 의지도 일상 생활화되고 있다.

거지가 없다 함은 自主·自立·自助·自辨·自足の 생활원리가 도민들의 일상에 뿌리 깊이 내려졌다는 말이 된다. 環海天險, 地瘠民貧, 土瘠民貧, 地狹民貧, 人多地窄, 地窄民多, 地窄民稠 등으로 지난날의 제주도를 표현하듯이 제주의 땅은 메마르고 백성들은 가난했었다. 땅은 비좁고 백성들은 너무 많았다. 돌맹이가 지천으로 구르는 밭은 대체로 火山灰土요 조·보리와 잡곡이 주요 곡물이었는데, 그나마 각 농가가 지니는 농토는 1 ha미만이요, 돌담으로 에워싸인 밭 한 뼤 한 뼤의 넓이는 너무 좁다랗다. 번번이 몰아치는 갖은 재난이 잇따라 백성들을 덮쳐 누르는 데도 이를 악물고 물리치면서 自主하면서 살아 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할 줄 알았으며, 물건을 철두철미 아껴 쓸 줄 알았다. 勤勉과 儉約, 곧 勤

48) 양중해·현용준 외,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제주도 : 1983), p. 16

儉의 生活哲理은 도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배어 있었다. 자기 생활은 하나에서 열까지 제 혼자가 짊어졌으니 노동을 외면한 收益을 바라거나 依他하는 일이란 사람 삶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거지가 없다 함은 어김없는 사실이기도 하려니와 이 言表가 지니는 바탕은 폭넓다.

‘盜無’는 결국 ‘大門無’를 이룩했다. 재래적인 제주도의 가옥에는 대문이 없는 집이 많다. 대문 대신 이른바 ‘정낭’이란 기다란 나무를 양쪽 구석에 세워진 ‘정주목’에 가로질러 놓음으로써 대문을 대신케 했다. 이는 단지 도둑이 없으니까 대문을 마련할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평면적인 해석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옛부터 제주도민들은 집집마다 가난하였으므로 대문을 마련하고 닫아서 잠가 두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느냐는 말로써도 제대로 풀이될 수 없다. 대문이 없음은 집집마다의 內生活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나와 남의 구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相互信賴와 協同의 소담스런 정신, 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정신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지고지선의 人類愛와 平和의 생활화인 것이다.<sup>49)</sup>

제주도민들은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三無’를 메마른 땅,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실현시켜 왔다. 삼무정신이란 아득한 옛부터 오늘날까지 제주도 사회에 ‘三無’를 실현시켜 온 정신, 또는 영원한 미래까지 ‘三無’를 지향하는 정신인 것이다.<sup>50)</sup>

그런데 삼무정신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4·3사건’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흔들여 놓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주도 사람들 중에 ‘4·3사건’의 응어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든 좌든 우든 4·3이라고 하는 비극적 사건에 모두 희생자들이다. 정신적, 물질적 희생자들이다. 최근에는 이 ‘4·3사건’의 치유방안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좌·우로 갈라졌다가, 이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 속에서 제주사회는 상당히 분열되어 가고 있다. 역사와의 화해,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단체 조직간의 화합과 평화가

49) 양중해·현용준 외, 앞의 글, pp. 17-18 참조.

50) 김동진, 『제주의 역사』 (제주 : 온누리, 2000), p.10 고성준·강근형,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8호,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1997), p. 51에서 재인용.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三無, 즉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문화적 유산은 평화의 가장 원초적 정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다시 복원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사회 자체가 평화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4·3 사건', '특별법'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제주사회에 새로운 단합과 조화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수준의 평화운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지난 시절의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주의 '平和의 섬' 구상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구현시켜 나가야 한다.



## 第 V 章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評價

### 第 1 節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限界 및 문제

'91년 4월 한소 정상회담 이후 제주 '平和의 섬' 구상에 관한 논의들은 간헐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었다. 예컨대, 기존의 학계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제주 '平和의 섬' 구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千篇一律적이고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구상 안의 현실화 측면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本 研究는 제주 '平和의 섬'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중앙정부의 무관심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 52 조에 따르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sup>51)</sup> 하지만 과연 중앙정부가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가?

'99년 12월에 개정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 52 조에 따르면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sup>52)</sup>고 규정하고 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平和의 섬' 만들기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토대가 세워졌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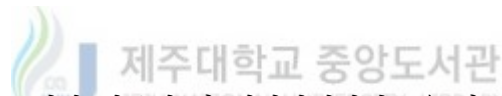
51) 『제주일보』, 1999년 12월 28일자.

52)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52 조 참조.

이러한 법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본 법규의 현실화에 있어 중앙 정부차원의 노력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특히 제주도 개발 특별법과 같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정은 이를 현실화함에 있어 중앙으로부터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볼 때,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마지막 개정이 있는 후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주 '평화의 섬' 구상 안의 조성 과 추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자체 발전 방향 및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살길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정부 보조금 및 지원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를 낳아 왔다. 게다가 타 지역에 비해 제주도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제주도에 할당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중앙정부의 비협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제주 '평화의 섬' 근거 법률인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개정 및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을 통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sup>53)</sup>

### 3. 도민의 참여문제

'96년에 고성준 등에 의해 이루어진 도민의식 조사연구에서, 제주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던졌던 질문은 “현 단계 제주사회는 농업, 관광산업 등에서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기 할 방향을 다음의 항목별로 본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고, 이에 대한 응답률은 '평화의 섬(25.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제휴양지'(18.6%), '국제회의산업'(15.1%), '자유무역항'(10.4%) 등의 순서였다.<sup>54)</sup> 한편, 가장 최근(2000년 10월)에 이루어진 조사연구에서도 '평화의 섬'으로 가야한다는 데 대해 높은 합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문가 집단은 72.0%가 빠른 시기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것을 국제자유도시 전략과 연계(26.0%)하고 국제 평화 및 협력기구 유치(24.0%)도 해 나가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빠른 시기에 '평화의 섬'으로 가야한다는 데 38.7%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고, '평화의 섬'의 추진을 남북대화 교류센터화(24.9%)와 세계 평화연구센터 건립(21.4%)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55)</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상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한 실정이고, 제주 '평화의 섬'구상의 주체라고 할 수

53) 김부찬,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방송인클럽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0), p. 32.

54)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공저,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2), pp. 107-110 참조.

55)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연구책임자 양길현),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제주지역 발전 방안 조사보고서』 (2000.11).

있는 제주도민들 또한 이를 현실화하는데 실질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4.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가지고 있는 역할상의 한계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 및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아직까지 평화상태가 아닌 대치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주도를 비무장, 비군사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평화교류 센터나 평화회담 센터 정도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5. 제주 '평화의 섬' 모형에 대한 합의 결여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민간차원에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이 구상안의 현실화를 위한 몇 가지 모형(Model)들이 전문가집단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논의만 분분할 뿐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전개를 위해 주체인 제주도민과 이러한 모델들을 제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다 할 합의된 모형을 제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 '평화의 섬' 모형에 대한 합의 결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구축시키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第 2 節 제주 ‘平和의 섬’ 구현을 위한 제언

제주 ‘平和의 섬’ 구현을 위한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平和의 섬’은 구호에만 그칠 뿐 정식으로 정책화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물론 ‘平和의 섬’이 정책과정상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절박하게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정책 또는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인식되도록 특징화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실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1. 제주 ‘平和의 섬’ 구현을 위한 지지기반의 조성

#### 1)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확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 52 조라는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였지만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주 ‘平和의 섬’을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조성하는 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지정·선포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 ‘平和의 섬’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平和의 섬’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즉 제주 ‘平和의 섬’과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한민족의



이해가 결린 문제임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국민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 2) 도민의 참여와 지지 확보

제주도가 한반도의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의 섬'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3%가 '평화의 섬'추진에 공감하고 있는데,<sup>56)</sup>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위상에 대해 어느 정도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천을 뒷받침할 추진력은 도민들의 단결된 힘에서 나오며, 단결된 힘은 도민 화합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평화의 섬'에 대한 담론만 무성할 뿐 그것의 실천이 안되었던 것도 도민화합을 전제로 한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아직도 제주사회에는 상충된 이해관계에 따른 계층 간, 지역 간의 드러나지 않는 불만,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는 한 현재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위상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추진 과정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대립과 반목을 씻어내고 진정한 도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sup>57)</sup> 이 구상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의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58)</sup>

56) 김부찬, 앞의 글, pp. 49-50.

57) 고성준,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제주 -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과 역할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0), pp. 45-46.

58) 고성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외 환경과 제2기 제주 '평화의 섬' 추진과제", 『남북정상 회담과 동아시아 신질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신아세아질서연구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1), p. 67.

## 2. 제주 '평화의 섬'의 실천전략

### 1) 평화교류센터 및 평화회담 센터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조성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교류센터나 평화회담 센터의 중심지로 제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평화교류센터는 평화 관련 연구와 평화 훈련 연수원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제회의 산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각종 평화관련 국제회의를 열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논하고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연구, 훈련, 회의, 분쟁조정 등의 종합적 기능을 갖는 평화의 중심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sup>59)</sup>

제주는 91년 한소 정상회담을 이후로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정상들의 국제회의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제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국민들의 최적지라는 이미지를 잘 살려 앞으로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신설하거나 관련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국제 컨벤션센터를 건설 중인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세계 이미지와 상반되는 국제회의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제주 '平和의 섬'이 수행하게 될 국제교류·협력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평화관련 국제 사이버화상회의 등을 제주 IT(정보기술)산업 계획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제주에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및 전자 상거래 기반 등을 마련하고 IT산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정보통신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즉 제주지역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화 수준이 높다는 점과 정보기술 산업의 최적지인데다 도민들의 정보화 노력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진 제주 '정보의 섬' 계획인 것이다.<sup>60)</sup> 따라서 앞으로 제주에 조성될 IT산업단지를 적극 활

59) 고성준, 앞의 글, p. 67.

60) 『제주일보』, 2001년 7월 27일자.

용하여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평화관련 국제 사이버화상회의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평화관련 회담의 장으로 마련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 2) 남북교류센터 및 남북평화센터 창설

최근 남북 간에는 전에 없는 화해의 분위기 조성과 제주의 전략적 거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주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제 3 차 장관급 회담 개최 이후로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측의 제주에 대한 선호성을 백분 활용하여 제주를 남북회담의 상설 개최지화를 할 때,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주도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회담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회담 장소를 상설화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비롯한 북한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백두-금강-한라를 연결하는 산악 테마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한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백두산 관광에서부터 동부의 금강산 관광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의 한라산 관광에 이르는 산악 테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관광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넷째, 제주와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북한의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한다.<sup>61)</sup>

다른 하나는 2001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제주에

---

61) 김부찬, 앞의 글, pp. 46-47.

서 개최된 '제주 평화포럼'에서 이 포럼을 앞으로 2년마다 정례화하고, 냉전의 마지막 고도(孤島)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체계적 연구 수행을 위한 민-관 공동 참여의 '남북평화센터'를 제주에 새롭게 설치하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sup>62)</sup> 남북평화센터가 가시화 될 경우,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 또 다른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평화관련 시설의 조성 및 효과적 운영

평화의 섬에 대한 이미지는 무형적인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에 대한 이미지는 이에 따른 시설이 건립되고 운영될 때 항구적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가. 4·3 공원 조성

4·3 특별법 제 8 조(위령사업)에는, "정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4·3 사료관 조성, 위령공원 조성 등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령사업, 즉 기념사업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위령 및 제례, 역사에 대한 기억, 평화·인권의 교육이며 그 표현 형태는 공원, 묘역, 위령탑, 사료관 등으로 요약된다.<sup>63)</sup>

4·3 공원의 조성은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고 도당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4·3의 엄청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4·3공원은 죽은 사람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이 어떤 경위로 죽었고, 그들의 죽음이 이 시대에

62) 『제주일보』, 2001년 6월 18일자.

63) 강창일, 앞의 글, p. 30.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공원을 조성하되 4·3 당시 이 땅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4·3을 일으켰던 무장대나 진압에 앞장섰던 토벌대의 대부분도 살상 당한 자들과 함께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져간 역사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즉 4·3공원은 4·3 당시 이 땅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3공원은 국가가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억압 받아온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기 위한 장치요 상징물로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지키고 가꾸는 거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4·3공원은 4·3을 모르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는 평화의 교육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인권을 짓밟고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sup>64)</sup>

#### 나. 평화박물관·평화민속촌의 건립과 운영

평화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의 의의도 평화공원과 마찬가지로이다. 평화박물관에는 지금까지 도내에서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까지 전쟁에 관련된 자료와 유물을 중심으로 보관, 전시하는 곳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평화의 섬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자료와 유물을 중심으로 보관되고 전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다면 제주지역의 평화박물관은 4·3과 관련이 있는 유물이 중심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한국전쟁과 태평양전쟁

64) 조성윤, “Ⅱ. 제주 4·3의 사회적 맥락과 공원조성에의 함의,” 『(가칭)제주 4·3 위령 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제주발전연구원, 중간보고서(요약본), 2001), p. 47.

의 유물이 될 것이다.

평화민속촌은 제주도의 전통과 문화가 평화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주기 위하여 평화를 주제로 한 옛 마을의 복원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민속촌이 지나치게 민속만을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지나치게 단순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느끼거나, 제주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화라는 주제를 고유문화와 연계를 하면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했던 옛 선 조들을 후손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평화의 섬의 토대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평화박물관과 평화민속촌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또는 지역이 어떻게 반폭력적인 전쟁, 그것도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대비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기관의 위치는 현재 성읍 민속마을을 재단장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로 신설하는 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건설의 어려움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sup>65)</sup>



#### 다. 평화의 섬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평화의 섬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함께 이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평화연구소도 비교우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특화된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4·3사건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연구소의 운영을 내전(civil war)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내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하면서 4·3사건의 전 과정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그 특징을 타 지역의 내전과 비교하여 그 위상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소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

65) 양영철, “제주의 평화의 섬 구축 전략,” 『동아시아연구논총 제8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7), p. 234.

사한 제주도 4·3사건피해조사보고서를 닌 픽션(non-fiction)화 하여 영상화하고, 기타 이에 관련된 자료를 DB화하여 자료의 효용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현재 5,000여 개의 세계평화지대와 연계하는 평화지대네트화(ZOPNET)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문제 해결과 교육에 관한 지역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소는 거대한 좋은 건물과 많은 연구직원을 두는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기존의 연구소와는 달리 발달된 정보통신을 이용한 가상연구소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의 연구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복잡다단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화연구소는 다른 연구와 달리 어느 한 연구소에 계속 머물면서 연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 연구소처럼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연구소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연구소가 될 것이므로 평화연구소는 세계의 평화연구가와 지도자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과 동시에 원하는 자료를 언제나 제공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세계의 평화연구자와 평화애호가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66)</sup>

#### 4) 평화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 나갈에 있어 요구되는 방안은 평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평화교육은 정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갈등의 비폭력적 해소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가치인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더욱 증진시키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67)</sup>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평화의 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함으로써 학생

66) 양영철, 앞의 글, pp. 234-235.

67)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0), p. 61 참조.



들로 하여금 비폭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하며, 마음속에 내적 평화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관용, 동정심, 공유, 배려의 자질을 확고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평등의식과 연대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의 섬' 교육을 통하여 제주인이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sup>68)</sup>

따라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제주대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평화에 관한 과목을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평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쟁과 평화는 구조와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에 의해 좌우된다. 정치사회화와 교육과정을 통해 평화가 체화(體化)된 사람들은 쉽사리 분쟁에 임하지 않는다. 평화의 시민성이 결여된 자들이 동물적 욕구에 의해 파괴적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제주사회에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평화지대나 평화의 생활 영역화는 수사학에 지나지 않게 된다. 평화교육이 확산될 때 평화관련 NGO들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NGO를 통해 평화의 구체화 작업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69)</sup>

둘째, 제주대학교 등 도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사이버 국제섬대학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국의 대학과 공동강의 등을 열어 가는 방법도 영어전문강좌 시스템의 도입 등의 프로그램은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면서 제주 '平和의 섬'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체를 통하여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인터넷상으로 국제적 홍보 매체의 준비나 국제적 학술지나 언론·방송의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sup>70)</sup>

---

68) 김부찬, 앞의 글, pp. 52-53.

69) 문정인, "Ⅲ. 제주 4·3의 정치적·미래적 맥락과 공원조성에의 함의," 『(가칭)제주 4·3 위령 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제주발전연구원 중간보고서(요약본), 2001), p. 71.

70) 고창훈, 앞의 글, p. 13.



셋째, 정당, 교회, 시민단체 등 정치,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그들 기관을 통해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종교단체가 평화교육의 프로그램을 각자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제주의 평화의 섬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부모를 위한 평화교육이 필요하듯이 이들 단체들의 실무자들과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어릴수록 선생님을 더욱 모방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절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나 사회단체들은 평화운동의 확산을 통하여 평화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 각종 걷기 대회, 단축마라톤대회, 자전거 대회를 평화교육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겠다.<sup>71)</sup>

## 5)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의 연계

최근에는 '평화의 섬'을 토대로 한 번영의 섬, 즉 국제자유도시 건설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지난 시절 제주개발계획을 둘러싸고 대립과 반목을 치유하고 실질적인 제주도의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국제자유도시'건설이다. 이에 대한 구상도 '평화의 섬'위상 만들기과 함께 일찍부터 검토되고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그 동안에 제기된 각종 방안들과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2차에 걸친 시민공청회도 열었으며, 중앙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왔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획단'이 제주와 함께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다른 특별자치구역의 지위를 부여받아 관광중심의 물류와 금융이 결합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될 것이다. 즉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50여년 간의 국민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활

---

71) 양영철, 앞의 글, pp. 240-241.

용, 관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1차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결합, 첨단 산업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는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되고 자본유치와 홍보 마케팅 등을 전담할 가칭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가 설립된다.<sup>72)</sup> 따라서 여기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과 제주 '평화의 섬'구상은 유기적인 관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제주도가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외부인들은 제주에 대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즉, '관광'과 '평화'의 통합 이미지가 필요하며,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업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가 각개 전투식으로 추진되는 듯한 인상을 가지면 안 된다. 제주 '평화의 섬'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에 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와 '번영'은 같이 갈 수 있다.

---

72) 『제민일보』, 2001년 7월 27일자.

## 第 VI 章 結 論

지금까지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평화의 섬'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평화의 개념을 적극적 평화관과 소극적 평화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즉 제주형 평화의 섬의 개념은 적극적 평화관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적으로는 제주 사람들간의 갈등과 대립 없이 정의와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고, 제주인 자체가 일구어 온 약자와 약한 지역의 평화를 지키려는 것이 제주 '평화의 섬'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재수의 난, 해녀투쟁, 4·3 사건을 중심으로 제주 역사의 흐름을 지역적·민족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國際的, 國內的, 道內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외부적인 요인인 국제적 차원에서 제주가 90년 한소 정상회담 이후 세계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의 최적지로 이용됨에 따라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논의가 학계와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국내적 차원에서는 제주의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이 침체되고 금강산 관광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대응책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내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흐름에서의 4·3 사건과 문화적 흐름에서의 삼무정신이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근거가 되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조성된 남북화해무드는 북측 대표단의 제주 방문 등을 통한 제주도민들의 교류협력의 기대심리가 무르익으면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하는 논의가 분분하게 나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도내적 차원에서는 1988년 이후 송악산 군사기지화 문제를 들 수 있

다. 정부의 군사기지화에 맞서 대정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로 시작된 송악산 군사기지화반대 운동은 반전반핵-평화의 섬 만들기와 결합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가 세계 평화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제주도민들이 갈망하게 되고, 제주 '평화의 섬' 구상도 이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나오게 되었다. 즉 제주만이 안고 있는 역사성, 자연조건, 지정학적 위치 등은 국제평화를 가져다 줄 장소로 부각되었다.

넷째,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논의들을 경제·정치·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제주 '평화의 섬'은 제주의 번영과 개발을 위한 평화의 섬이며 정치적 차원에서의 제주 '평화의 섬'은 제주도를 '평화지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제주 '평화의 섬'은 수난과 항쟁으로 얼룩진 과거 제주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러한 비극이 제주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의 평화 지향적 전통 유산인 삼무정신을 복원한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평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주 '평화의 섬' 구상 논의들을 연구하면서 발견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은 우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제주도민들 사이에 집약이 안 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인식되도록 중앙정부에 특징화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99년 12월에 개정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 52 조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본 법규를 현실화함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지원하는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한계

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실현시키는데 이러한 점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참여문제를 들 수 있다. 도민들의 '평화의 섬'구상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상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한 실정이고, 제주 '평화의 섬'구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민들 또한 이를 현실화하는데 실질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데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실천방안이 모색되었다. 우선 제주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지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기반과 도민의 참여와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의 섬'을 실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제주를 평화교류센터 및 평화회담 센터로 조성, 남북교류센터 및 남북평화센터를 제주에 창설, 그리고 평화의 섬 연구소의 설립 및 평화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국제자유도시 전략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제주 '평화의 섬'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 구상안을 역사·문화적 모델, 경제적 모델 그리고 정치·군사적 모델을 통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로서의 제주 '평화의 섬'의 지평을 열고자 한다. 환언하면, 역사·문화적 모델은 4·3사건,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 등과 같은 과거 제주인들의 평화 수호를 위한 평화의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평화 포럼 및 회담, 평화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의 설립 등의 활동들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제주도 내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 세계 평화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소들과 더불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국제 물자와 정보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경제적 모델

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의 전개 선상에서 회의산업을 겨냥한 평화교류 센터 혹은 평화협력 센터의 활성화에 초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평화지대화 하는 정치·군사적 모델은 아직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실적으로 이 모델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제주를 비무장·평화지대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위의 세 가지 모델들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안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즉 제주가 세계 평화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주의 운동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거듭하는데 중요한 단계들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研究가 안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평화의 섬' 개념 정립을 위해 이제까지 학계와 민간차원에서 논의된 자료들과 제주의 역사와 평화관련 서적들을 참조하면서 연구하였으나 개념정립을 하는데 미비하므로 이러한 점에 더욱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본 研究가 현재까지 논의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개념정립을 했다는 것과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라는 정책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술논문으로서 연구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研究는 앞으로의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 계획에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研究는 현재까지 제기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논의들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제주 '평화의 섬' 구상 研究는 제주가 남북의 교류,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준비와 역할, 그리고 세계 평화에의 역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 정책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이미지의 재정립과 사업적이고 분야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좀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参 考〉

### 평화연구 관련 기관

- The African Peace Research Association (AFPRA)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The Asia-Pacific Peace Research Association (APPRA)
-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The Carter Center
- The Center for Global Peace - American University
-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 Exploring Global Conflict: An Internet Guide to the Study of Conflict
- M.K. Gandhi Institute for Nonviolence
- Growing Communities for Peace
- Institute of Peace & Conflict Studies
- The Institute of World Affairs
-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 International Service for Peace
- Jewish Peace Fellowship
- Joan B.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 NH Peace Action
-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PBI)
- PeaceBuilders
- Peace Pledge Union
- Peace Resource Center
- Peace Studies Resources Institute

- Peacewire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 The Tabula Rasa Institute
- Tampere Peace Research Institute (TAPRI)
- Toda Institute for Global Peace and Policy Research
-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and Future Research
-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The Widows of War Living Memorial
-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 평화연구 자료

- The Consortium on Peace Research, Education, and Development
- OJPCR: The Online Journal of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 Peace and Conflict - The Home of Peace Studies on the World-Wide Web
- Peace and Conflict Studies (Journal)
- Peacebuilding - Newsletter of the Peace Education Commission
- Internet Resources on Peace, Conflicts and International Women's Human Rights
- Peace on the net
- Peace Studies Association
- PeaceNet
- Resources for Peace
- SJA Peace and Justice Links
- Society for the study of Peace, Conflict, and Violence: Peace Psychology division of the APA
- UN & Conflict Monitor



- UNESCO's Transdisciplinary Project Towards a Culture of Peace
- The WWW Virtual Library: International Affairs Resources: Peace, Conflict Resolu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 Peace Discussion List - To subscribe send the message "SUBSCRIBE PEACE your name" without the quotation marks to listproc@csf.colorado.edu
- Peace Education Commission Discussion List - To subscribe, send the message "subscribe pec your name" without the quotation marks to listserv@csd.uwm.edu

## 비폭력

- APA's Warning Signs: A Violence Prevention Guide for Youth
- The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 Department of Education's Keeping Schools and Communities Safe
- Minnesota Center Against Violence and Abuse
- National Campaign to Reduce Youth Violence
- National Civil Rights Museum
- Nonviolence International
- The Nonviolence Web
- OneWorld
- Partnerships Against Violence Network

## 분쟁 예방

-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ve Conflict Management
- Center for Conflict Management - Norway
- Conflict Archive on the Internet (CAIN)

- Conflict Research Consortium
- Conflict Resolution Center International
-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 INCORE: the Initiative on Conflict Resolution and Ethnicity
- Institute for Collaborative Solutions
- The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IMCR)
- National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 Ohio Commission on Dispute Resolution and Conflict Management - Includes curriculum resources
- Saferworld
- ConflictNet
- Conciliation Resources

## 기타



- Correspondence Courses 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Global Exchange
- Global Volunteers
- PeaceTrees Vietnam
- The People's Decade of Human Rights Education
- Program on Negotiation Clearinghouse (Harvard University)
- Project America
- The Psychology of Ethnopolitical Warfare Web Pages United Nations (UN)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ited Nations - Human Rights

## 국내 평화연구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주간 남북관계, 북한정보, 통일교육, 탈북자대담, 재외동포포럼 등 안내.
- 평화통일의 길 - 민족화해연구회, 3평제 통일론, 평화 통일의 길 등 소개.
- 아시아연구기금 (ARF) - 지역, 사회, 문화, 평화, 경제, 산업 부분 학술연구지원 사업 및 학술 교류지원사업을 위한 민간비영리 법인.
- 자유민주민족회의 - 건국이념의 수호 발전과 민주평화통일 운동의 연구 및 계도 사업 수행단체.
- 세민재단 - 민간 연구기관 및 지원단체로서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협력, 지구환경 보전 관련포럼 안내, 발간 뉴스레터 및 논문자료 제공
- 한국전쟁과 재일한국 조선인 민족운동 -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원 남기정 저, 민족연구 제5호에 수록.

## 參 考 文 獻

### I. 國 內

#### 1. 1次 資料 및 公共資料

- 모슬포군비행장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 『알뜨르』, 1988. 11. 4.
- 제주도 · Jones Lang Lasalle,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 보고서-』, 2000. 6.
- 제주도의회, 『제주 4·3 자료집 - 미군정 보고서』, 내내로 전자출판, 2000. 11.
- 제주 4·3 연구소 편, 『제주 4·3 자료집 II- 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도서출판  
각, 2001. 3.
- 제주 발전연구원, 『(가칭)제주 4·3 위령 공원 조성 기본계획』, 중간보고서, 2001. 2.  
\_\_\_\_\_, 『(가칭)제주 4·3 위령 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중간보고서(요약본). 2001. 2.
- \_\_\_\_\_, 『(가칭)제주 4·3 위령 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 부문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제 2 차 제주도민공청회 자료, 2001. 4.
- 제주도 · \_\_\_\_\_, 『동북아의 공동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평화 포럼』,  
2001. 6. 15 ~ 17.

#### 2. 單行本

- 강대원, 『海女研究』, 서울 : 한진문화사, 1973. 4.
- 노동일, 『정치학방법론 - 이론 · 통계 · SPSS』, 서울 : 법문사, 1996.
-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 - 제주도 4·3 항쟁의 기록』, 청주: 온누리, 1988. 2.
- 아시아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II』, 서울 : 소나무, 1989.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제주도 유배인 열전』,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9. 1.
- 유홍렬,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역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62.
-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 4·3연구소·한국 역사연구회, 『제주 4·3 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1988. 2.
-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을 말한다 2』, 서울 : 전예원, 1995년 3월.  
 \_\_\_\_\_, 『4·3을 말한다 3』, 서울 : 전예원, 1994.
- 제주관광협회, 『제주 통사』, 제주 : 제주문화, 1987.
- 제주국제협의회, 『전환기의 제주』,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제 1 집, 서울 : 신라출판사, 1991  
 \_\_\_\_\_, 『평화와 번영의 제주』,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제 2 집, 서울 : 신라출판사, 1993.
- 제주 4·3 연구소, 『제주 항쟁』, 제주 : 실천문화사, 1999. 4.  
 \_\_\_\_\_, 『이제사 말함수다 2』, 서울 : 한울, 1989.  
 \_\_\_\_\_, 『4·3 長征 6』, 제주 : 나라출판, 1993. 9.

### 3. 論文

- 강근형,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미국,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신아세아질서 연구회, 2001. 5.
- 고성준·강근형,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 8 집 , 제주대학 동아시아연구소, 1997.  
 \_\_\_\_\_·강근형·양영철, 『제주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구축전략』,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워크샵 발표논문, 1998.  
 \_\_\_\_\_·양영철, 『제주의 생존·번영·평화를 위한 미래전략 - 세계화 추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 국제협의회 제 1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4.

\_\_\_\_\_,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변화와 한반도에 관한 연구 - 환경변화에 따른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과 관련하여 -”,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 11 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 2.

\_\_\_\_\_,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외환경과 제 2 기 제주 '평화의 섬' 추진과 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질서 연구회, 2001. 5.

\_\_\_\_\_, 『남북화해 · 협력 시대와 제주 -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과 역할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0. 9.

\_\_\_\_\_. 강근형 · 양영철, 『제주 '평화의 섬'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구축전략』,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워크샵 발표논문, 1998.

고창훈, “평화섬 정책의 준거틀과 실천논리 : 남북통일을 위한 6개국(2+4) 평화섬 조직위 유치를 중심으로”, 『섬과 대륙의 공영 : 그 하나됨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주대학교 섬 연구소, 국제학술회의발표자료, 2000.

김경택, 『제주감귤의 수출촉진 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 11 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2000.

\_\_\_\_\_, 『감귤수출의 경제적 효과 및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 9 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1998.

김동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0. 9.

김부찬,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의 설정 및 법·제도적 검토』,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워크샵 발표논문, 1998.

\_\_\_\_\_, 『섬(島)문명 르네상스를 위한 아시아 지역 '해양협력 및 연대'의 증진』,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0. 4.

\_\_\_\_\_,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제주발전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0. 10.

김세택, 『제주 '평화의 섬' 지정 필요성』, 제주발전연구원 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2000. 10.

김진호,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념으로서 평화의 섬』, 제주국제협의회 제1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4.

박찬식, “제주 海女の 抗日運動”,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 : 태화인쇄사, 1995. 8.

서용구,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산업구조의 재편 - 전망과 대안 -』, 제주국제협의회 제1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4.

양영철, “제주의 평화의 섬 구축 전략”,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 8 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7.

#### 4. 新聞

『제주신문』, 1987년 11월 27일자.

\_\_\_\_\_, 1988년 8월 30일자.

\_\_\_\_\_, 1988년 10월 17일자.

\_\_\_\_\_, 1988년 10월 29일자.

\_\_\_\_\_, 1988년 12월 7일자.

\_\_\_\_\_, 1989년 2월 4일자.

\_\_\_\_\_, 1989년 3월 4일자.

\_\_\_\_\_, 1989년 10월 7일자.

『제민일보』, 1991년 4월 18일자.

\_\_\_\_\_, 1991년 4월 19일자.

\_\_\_\_\_, 1991년 4월 20일자.

『제주신문』, 1991년 4월 20일자.

\_\_\_\_\_, 1991년 4월 21일자.

『제민일보』, 1991년 4월 22일자.



『제주일보』, 1997년 12월 2일자.

『제주일보』, 2000년 1월 8일자.

\_\_\_\_\_, 2001년 6월 16일자.

『제민일보』, 2001년 6월 18일자.

『제주일보』, 2001년 6월 18일자.

\_\_\_\_\_, 2001년 7월 27일자.

## 5. 인터넷 자료

<http://www.supertiger.pe.kr/text12/햇별정책.htm>

## II. 國外

### 1. 1次 資料 및 公共資料



Okinawa Prefectural Government, The Cosmopolitan City Formation Concept  
“Grand Design For a New Okinawa Aiming at the 21st Century”,  
(Okinawa, 1996).

### 2. BOOKS

Dogan · Pelassy,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비교정치연구의 전략-, 서울, 1992.

Johan Galtung, Peace, in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74)

\_\_\_\_\_ and Carl G. Jacobsen, Searching for Peace - The  
Road to TRANSCEND,

Richard Falk, Contending Approaches to world order, Toward a Just World Order, Vol.1 ,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2)

\_\_\_\_\_, Normative Initiatives and Demilitarization: A Third System Approach, Toward a Just World Order, Vol.1,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2)

\_\_\_\_\_ ; What New System of World Order?, Toward a Just World Order, Vol.1,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2)

Robert Johansen, Toward a dependable peace: A proposal for an appropriate security system, Toward a Just World Order, Vol.1,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2)

### 3. ARTICLES

Fouad Ajami, Human Rights and World Order Politics, Toward a Just World Order, Vol.1,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2)

Hyun, Chang-sung · Cho, Yong-hee · Park, Chan-sik · Han, Seok-ji · Ko, Chang-hoon,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The Historical Flow and Significance of the case studies from the 1000 years in Jeju,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3,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Co., 2000.

John Galtung (1969: 184) In 1969 law and order was left-wing rhetoric for rightwing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 conservative status quo.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1980

Kang, Dae-won, A Process and Problem of Woman Divers Diving in the Jeju-do, Hae-nyo(Woman Diver) Study. 1970.

Ko, Bu-un, The Island of Opportunity Jeju International Free Zone Island

Focusing on the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hosted by Research center for Islands & other 5 research institute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Announcement paper of International Conference : Co-prosperity of Islands and Continents :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their Cohabitation*. 2000.

Ko, Chang-hoon, The Sociological and Economic Interpretation on Jeju Uprising (1945- 1948), *Jeju Uprising*, Vol. 1, The Action Literature Co. 1991.

\_\_\_\_\_ · Han, Suk-Ji, A Study on Policy Issues and Problem in the Making Special Law for Jeju Development, *Space and Society*, Vol. 2, Seoul Public Co., 1992.

\_\_\_\_\_ · Han, Suk-ji · Lee, Kyung-joo , Ocean Tolerance and A Model for Island Development: Phenomenological Synthesis of Island Pragmatism and Ocean Frontiership,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 1,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Co. 1998.

\_\_\_\_\_ · Richard Tim Allen · Lee, Bong-hee and Yang, Rae jin , A Survival Strategy for Islands: A Model for Jeju-do International Free Zone: Practical Thoughts about goal sharing between Islanders and foreign investors,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2,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Co. 1999.

\_\_\_\_\_, The Framework for a Peaceful Island and Execution Rationale, hosted by Research center for Islands & other 5 research institute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Announcement paper of International Conference : Co-prosperity of Islands and Continents :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their Cohabitation*. 2000.

R.J. Rummel,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 Vol.5 The just peac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1)

Johan Galtung, *Solving Conflicts: A Peace Research Perspective* (University of

Hawaii Institute for Peace, 1989)

Kumar Rupensinghe, “The Disappearing Boundarie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in Elise Boulding (ed.), *New Agendas for Peace Research* (Lynne Rienner, 1992), pp. 43-64

### Ⅲ. 日語文獻

金泰能 : 「濟州島略史」, 東京, 新幹社, 1988.

